

금융위·금감원·국토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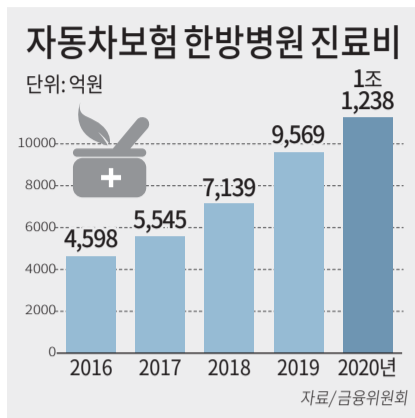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적용... 손보업계, 손해율 개선 기대

본인 과실부분 자보험 처리
의료기관 진단서 의무화
보험료 지급기준 구체화

오는 2023년부터 자동차사고 발생시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에 따라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오랜 골칫거리로 여겨졌던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내놨다.

우선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하도록 변경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대 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왔다. 때문에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과잉진료가 이어지는 경우가 잦았다.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도 의무화한다.

상급병실, 한방분야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한다는 전략이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침약·약침 등에 대한 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5400억원의 과잉처리가 줄고, 전 국민당 보험료를 2만~3만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그간 자동차보험의 문제점으로 여겨졌던 한방진료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전망이다.

실제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병원 진료비는 ▲2016년 4598억원 ▲2017년 5545억원 ▲2018년 7139억원 ▲2019년 9569억원으로 지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한방병원 진료비가 1조1238억원으로 훌쩍 뛰기도 했다.

이는 곧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이어져 왔다. 손해율은 보험사로 들어온 보험료 중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용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사업비 지출을 고려해 78~80% 정도를 적정 손해율로 측정하고 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가마감 기준 주요 손보사(삼성·현대·DB·KB) 등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77.37%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2%포인트(P) 개선된 수준이다.

다만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이동량이 줄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즉,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될 경우 손해율이 곧바로 치솟을 가능성도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제도개선안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은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정상화 필요성 느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라며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당연히 손해율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한방진료 등은 연구영역 등 절차가 마무리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 아직은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권광석 우리은행장이 '제24회 우리은행 우리미술대회'에서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 우리미술대회 본선 개최

우리은행은 지난 10일 '제24회 우리은행 우리미술대회' 본선대회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총 300명의 본선 진출자들이 개인 공간에서 쌍방향 영상 플랫폼을 이용해 참가했다.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예선에는 국내 참가자를 비롯해 미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 9개국 참가자들이 참여했다. 미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총 300명이 본선대회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는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가 GREEN 그림!'이라는 컨셉으로 개최됐으며 플래시 게임 및 대회 참여 인증샷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우리미술대회는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포함해 본선대회 참가자 모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우리미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6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외면받는 은행점포... 5년간 775곳 문 닫아

올 상반기에만 79개 점포 사라져
"협업 기반 공동점포 운영 검토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거래가 지속되면서 올 상반기에만 은행점포 79개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해외사례를 적용해 '공동점포'를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국내은행 점포수는 총 6326개로 지난해 말보다 79개 줄었다. 90개 점포가 폐쇄됐고 11개 점포가 새로 신설됐다.

은행권 비용 효율화와 비대면 거래 확대로 은행권 영업 점포수는 최근 5년 전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2018년 23개, 2019년 57개, 2020년에는 무려 304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2016년(7101개)과 비교하면 10.9%(775개) 감소했다.

업계에선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문 닫는 점포수는 세자릿수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은행권 점포 감소 현황>

구분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6월
시중은행	4314	4144 (-170)	3861 (-283)	3834 (-27)	3784 (-50)	3546 (-238)	3492 (-54)
지방은행	964	967 (3)	952 (-15)	933 (-19)	933 (-)	889 (-44)	874 (-15)
특수은행	2003	1990 (-13)	1976 (-14)	1999 (23)	1992 (-7)	1970 (-22)	1960 (-10)
합계	7281	7101 (-180)	6789 (-312)	6766 (-23)	6709 (-57)	6405 (-304)	6326 (-79)

단위: 개, () 전년 말 대비 증감

/금융감독원

현재 시중은행은 총 54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으며 전체 68.4%를 차지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18개의 점포가 줄었고, 이어 산업은행(8개), 대구은행(7개), 우리은행(6개), 신한은행(5개), 씨티은행(4개) 순으로 점포수가 줄었다.

이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은행이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동점포 운영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2019

년 중소기업과 소호 대상 공동점포 '비즈니스 뱅킹 HUB'를 운영했고 올해 4월부터는 일반 고객 대상의 '뱅크 HUB'를 2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일본도 지방은행인 치바은행이 다이스은행, 무사시노은행 등과 협약을 통해 영업점을 공동으로 운영해 커버리지 확대 및 지역사회 기반을 유지하면서 공동점포로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해외 글로벌 은행들은 점포 운영 효율화에 대해 고민해 협업 기반의 공동

점포 운영을 대안으로 삼은 것이다.

공동점포는 저비용으로 디지털 소외 계층의 기존 고객 유지와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백오피스 업무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임차료를 절감하는 등 저비용으로 오프라인 채널을 운영해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빅테크, 비대면 거래 확대로 시중은행 점포수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국내 은행들은 현재 상황에서 점포 효율방안과 금융소비자까지 편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점포 운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선 하나은행과 산업은행이 은행간 공동점포를 운영기로 했다. 국내 은행간 공동점포 운영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월 영업점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공유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고 산업은행 고객은 내년부터 전국 650여곳의 하나은행 점포와 ATM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13개 폐업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41억 중 21억 반환

미 반환 피해 신고 아직 없어

지난달 말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마감 이후 2주일이 지난 가운데 폐업한 거래소에 예치되어 있던 돈 절반 가량이 반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기한 내 확

득하지 못해 지난달 25일부터 영업을 종료한 13개 거래소의 예치금 41억원 중 20억원 가량이 이용자들에게 되돌아갔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들 거래소에 남아있는 예치금이 약 41억80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FIU는 미신고 거래소가 폐업하면서 예치금 횡령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함께 동향을 점

검하고 있다.

일부 거래소에서 서버 등 문제로 인해 예치금 반환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금융당국에 기획파산 등으로 인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 신고는 아직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특금법상 지난달 24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후 폐업한 거래소는 IS

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13곳과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23곳 등 총 36곳이다.

한편,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총 29곳이다. ISMS 인증과 함께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한 곳은 업비트, 코빗, 빗썬, 코인원 등 4대 거래소로 원화마켓 운영 사업자로 신고를 진행했다. 나머지 25곳은 원화거래 없이 코인마켓 운영 사업자로만 신고한 상황이다.

/이영석기자 ysl@

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13곳과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23곳 등 총 36곳이다.

유일봉 개인종합자산관리Cell 리더는 11일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 파트너로서 NH자산+만의 차별화된 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소원 기자 think@